

상용차 실증 인프라 전북이 최적지

국내 중대형 시장 90% 차지... 개방형 시험장 조성·관제 데이터센터 등 제안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조성이 문제 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가운데 자율주행 시장을 이끌 상용차에 대한 실증 인프라 조성이 전북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23일 정책브리프 '상용차 생산 1번지 전라북도, 상용차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 과제'를 통해 해외 상용차 자율주행 동향과 전북의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개방형 시험장 및 관제 데이터센터 조성, 자율주행 고속도로 및 국도 지정 등을 제안했다.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중대형 상용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전북이 자율주행 실증에 있어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 도 상용차산업 여건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력 속에서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승용차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이벤트가 집중돼 중대형 상용차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 투자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지훈(미래전략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대형사고 방지, 물류업체의 원가절감 수요, 고속도로 위주 운행으로 사립화 용이성 측면에서 시장 형성이 상용차 승용차보다 빠를 것이기 때문에 상용차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며, "국정과제로 제시된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이 상용차에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수변간선도로를 활용해 상용차에 특화된 개방형 시험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실증 테스트를 통해 취득하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제 데이터센터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새만금 도로에 일부 장치가 설치될 경우 국내 실도로 기반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실증 인프라를 갖추어 여러 대를 네트워크로 묶어 주행하는 군집주행(Platooning) 실증과 각종 이벤트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또한 도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상용차 특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으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권을 현재 국토부장관에게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실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민방위의 날 주민대피 훈련이 23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소방본부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살리기' 전문가 결집

전북도는 23일 새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권, 학계, 연구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세미나'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례를 통해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새정부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과 주요과제, 타 지역 우수지원 사례를 주제로 한 주제발표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전문가 패널의 토론, 정책제언 발굴 등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의 현 위상과 주요과제'란 주제발표에 나선 홍석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가의 활기찬 생태계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중장기적 틀 안에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북소상

전북도 지원정책 세미나 개최

정치권·연구진 등 방안 모색

공인연합회, 유관기관, 시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여 새정부의 인건비 지원 방침과 절차에 맞춰 전라북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상공인 지원관련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농식품 해외 수출길 넓힌다

29일 생진원 비즈니스센터서 미·중·일 해외바이어 초청 주요 국가별 수출 전략 설명회

전북도와 (재)전라북도생산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생진원 비즈니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농식품 수출기업, 수출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별 농식품 수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 미국, 중국, 일본 3개 국가에서 한국 농식품을 수입·유통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를 직접 초청해 각 국가별 농식품 시장동향,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 요령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초청된 바이어 중 월마트, 아마존 등 미국 대형유통채널에 한국 농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SW 그린라이프 대니 박 대표는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도내 농식품 기업들에게

미국의 까다로운 수입·검역절차 등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FDA(미국 식품의약국) 라벨링 규정 준수 방법, FSMA(식품안전현대화법)상 식품 안전 관련 제도에 대한 관한 설명과 월마트와 같은 현지 대형 유통업체 납품 성공사례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중국 최대 한국 농식품 수입·유통회사중의 하나인 '청도해지존내집유한공사'의 광동민 대표는 중국 내 수입식품 소비 변화, 중국 수출 시 선적서류 작성 요령, 수입 상품검사구역 대처 방법, 중국 상관습에 이르기까지 중국 시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내 식품기업들이 어렵고 막연하게만 생각왔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걷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해외 현지에서 한국식품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의 생생한 정보와 경험담들을 통해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내달 4일까지 공개 모집

전북도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오는 9월 30일료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위원을 내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 후 17명(전주, 군산, 익산 각 2명, 11개 시군 각 1명)을 선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선정될 위원의 임기는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이다.

위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논의를 통해 도의 재정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공개모집, 안전, 문화체육, 복지,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재정전문가, 공무원 등 약 35명으로 구성 된다.

공고일 현재 전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으로 재정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한편, 도는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기존에 참여율이 낮았던 여성위원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집예정인원 초과 시 여성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위원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신청서를 내려 받아 방문 및 우편(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예산과) 또는 이메일(dof111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곽승기 예산과장은 "도의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서해 황금어장 불법조업 칼날

내달 5일까지 육·해상 집중단속... 어업질서 확립

전북도는 멸치, 꽃게, 전어 등 가을 성어를 맞아 타지 어선과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의 사전차단을 위해 서해어업관리단, 해경서, 도시군 합동으로 8월24일부터 9월5일까지 육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내 연안에 형성되기 시작한 멸치어장은 충남해역으로 이동하는 11월 중순까지 어장이 유지되면서 충남과 전남의 연안선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과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우려되며, 멸치 포획 목적의 연안계랑안강망의 그물로 규격 위반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을철 별미인 전어 성어기 도래와 금어기(6.21~8.20)가 끝난 꽃게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어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 남획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민 물고기 포획,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에 대하여 해상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에서는 수협 위관장 및 재래시장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서간 협업으로 황금어장 수호 및 소형어선어업인 보호

를 위해 우심해역에 대한 야간단속과 육·해상 합동단속을 통해 엄격 대처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반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5월)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서해안에 멸치 어장(6월 중순)과 오징어 어장(7월 중순)이 형성되어 이를 둘러싼 어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남획의 가속화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서해안 특별단속은 멸치, 꽃게, 전어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민 물고기 보호 필요성 증대와 금지구역 침범 등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이를 둘러싼 어종 간 갈등해소와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꽃게, 전어 등 성어기에 타 지역 어선의 불법조업과 무허가 어선 등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어민 물고기 보호를 위하여 포획금지기간, 금지채장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특히,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업인들이 건전한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